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2. 2. 4(금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공공택지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양희관, 사무관 정재원 ☎ (044) 201-4515
	도심주택총괄과	담당자	• 과장 전인재, 사무관 오원택 ☎ (044) 201-4387
	도심주택협력과	담당자	• 과장 안세희, 사무관 황규오 ☎ (044) 201-494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2.4대책의 주택공급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 등, 2.3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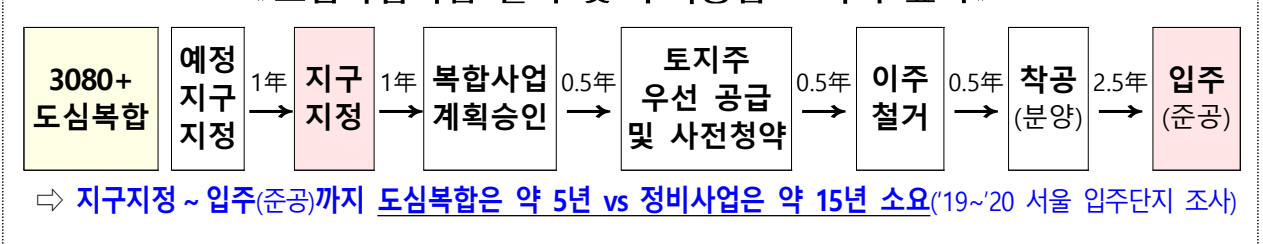
◆ 2.4대책 1년, 주택공급 목표치 반타작

- 도심복합사업 1만8천가구 중 용지확보 9,686가구 불과, 76곳 중 41곳 철회 움직임
- 공공 직접시행 목표 13.6만가구 중 1천 가구만, 법안처리 국회서 감감
- 26만채 공공택지 개발도 난항, 광명시흥 주민설명회 무산돼

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발표한 후보지 76곳(10만호) 중 26곳(3.6만호)에서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/3동의 이상을 확보하고, 이 중 7곳(1만호)은 작년 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

-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작년 9월에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단 기간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것이며,
 -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 시 후보지 선정~지구지정까지 4년 이상 단축, 지구지정~입주(준공)까지 10년 이상 단축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《도심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》



○ 아울러, 다수 후보지에서 높은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어 금년에는 지구지정 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구지정 법적요건인 **주민 동의 2/3이상**을 확보한 곳은 **26곳(3.6만호)**, **50% 이상 동의는 33곳(4.4만호)**에 해당('22.1월말 기준, 누계)

□ 또한, 도심복합사업 반대연합회에서 주장하는 41곳은 일부 소수 주민이 반대하는 구역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, 이들 모든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발생^{*}하는 것은 아닙니다.

* '22년 1월말 기준, 전체 76곳 후보지 중 주민 30% 이상이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한 구역은 5곳(서울 2, 부산 2, 대구1)에 불과

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구역 내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, 정부는 후보지 구역별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□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향후 입법이 진행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,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법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* 타 공공정비사업(공공 재개발·재건축)은 현재 3.6만호의 후보지를 선정하고, 시행자를 지정(7곳)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

□ 2.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7.2만호^{*}(당초 계획 26.3만호 대비 9천호 증가)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* 27.2만호 = 신규 공공택지 25.9만호 + 행정중심복합도시 용도변경 등 1.3만호

○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설명회가 무산되었으나, 이후 공청회를 개최('22.1)하여 현재 사업절차를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으며, 다른 공공택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이를 통해 올해에는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^{*}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공공택지의 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.

* 수도권에만 20만호 수준의 공공택지 공급이 확정되는 것으로,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(3.7만호)의 5배를 넘는 수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기획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5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